

민주당 '경제 살리기' 부각... 세계개편·AI·경제 광폭 행보

상속세·근로소득세, 상법 개정안 국내생산 촉진 세제 등 잇따라 제안 K-엔비디아 기업에 조세부담 경감 추, SK그룹 등 경제계 인사 만나기도

더불어민주당이 조세·금융 관련 정책 제안을 연속해 내놓으며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부각해 중원(중도층)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상법 개정안 추진,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등을 잇따라 제안했다. 상속세 개편은 현행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확대해 총 18억원의 공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민주당은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 인상 속도가 따라잡지 못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 개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세청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추진 세금·금융·AI 정책	
상속세 개편	현행 :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민주당 : 상속세 일괄공제 8억원+배우자 상속공제 10억원
근로소득세 개편	현행 :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 직장인 식대 비과세 20만원. 민주당 :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8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30만원.
상법 개정안 추진	현행 :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민주당 : 상법 제382조3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국내생산촉진세제	현행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기업 설비투자 금액 일부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공제 민주당 : 국가전략사업으로 국내 최종 제조 제품,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10년간 부여
K-엔비디아	AI 관련 기업에 국민펀드나 국부펀드가 공동투자해 조세부담 경감

18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임의원이 속한 국회 조세금융포럼은 오는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토론회를 연다.

이외에도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경제계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와 법사위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민주당은 현행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넘어 국가전략산업으로 국내 최종 제조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10년간 부여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AI(인공지능) 분야에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유튜브 영상에서 대답을 나누던 중,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투자해 지분을 확보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오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싱크탱크)장 등이 정부와 기업을 한 몸으로 생각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나"라며 "국무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참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행정가의 이미지를 쌓아왔고 '중도보수'를 선언한 만큼, 만년 야당 대표에서 벗어나, 실력 있는 경제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석 현대차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며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일엔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과 '사피(삼성청년SW아카데미·SAFFY) 아카데미'에서 만나 청년의 사회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중산층에 유리한 금융·세금 정책에 관심을 두는 것 같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금융·조세 정책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해 정책화하는 것인데, 최근 정당의 행동을 보면 조기 대선 가능성을 보고 유권자의 표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생산해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崔대행, '마은혁 임명' 침묵... 국정협의회 대신 여야협의회 열린다

국무회의서도 임명 결정 안 해 尹·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영향

민주당 "헌법 무시하는 崔대행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공전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을 결정하지 않았다.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최 권한대행이 빠진 여야협의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같은 날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아직까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국정협의회 참여 촉구와 국민연금 합의, 의대생 휴학 사태 등 현안만 언급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했다.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자의 거취가 국정 전반에 불려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해, 임명 문제는 성급히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이 이같은 조언을 건넨 것은 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의 강한 반발과 국정 전반에 파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즉시 임명할 시 여당의 반발도 극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9일과 25일 각각 현재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숙고가 깊어지는 요인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한 총리의 선고 및 복귀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탄핵심

판 선고도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가적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변론이 끝난 가운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현재는 이같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 여권의 '헌재 흔들기'는 더 극심해진다는 것이다.

만일 마 후보자를 임명한 후, 추가 변론기일을 몇차례 잡은 후 선고를 한다고 가정해도 문제다. 이 경우 '9인 체제'의 현재가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 '5(인용):3(기각)'로 기각될 것을 마은혁 임명으로 6:3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먼저

임명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일단 이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

이에 민주당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날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6일 오후 4시에 '여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민생 현안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질적 민생 개혁은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협의회를 신속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이재용 만나 청년 사회진출 지원방안 논의

오는 20일 '사피 아카데미'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피(삼성청년SW아카데미·SAFFY)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 회장과 만난다고 밝혔다. 사피 아카데미는 삼성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

대와 청년 취업을 위해 2018년 시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사피 아카데미는 1년간 매일 8시간 총 1600시간 동안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SW 개발자를 양성한다. 연간 교육생은 2300명 수준이고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교육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관계자는 "경제 위기 속에 가장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심도 깊은 대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

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SK 'AI서밋 2024' 방문,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 등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회장과 만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이 토론 주제로 잡혀있지 않지만, 논의 소재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미국發 통상전쟁 대응... '통합의 힘' 절실"

崔대행, 국정협의회 재가동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발 통상전쟁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요청한 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영원한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

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